

이슈브리프 393호
(2022.10. 5)

최근 북한의 대중, 대러 접근과 한반도 정세

제393호

이수석·안제노 한반도전략연구실



국문초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세계질서가 변하고 있다. 미국 단독의 패권질서가 무너지면서 기존의 미중 경제패권 경쟁에 이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외교·군사 갈등까지 발생했다. 21세기 국제질서가 마치 냉전시대로 돌아가는 형국이다. 이런 변화에 주목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대 중러 간의 외교 및 군사갈등으로 세계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국제질서의 변화를 바탕으로 북한은 기존의 고립탈피 전략을 넘어 한반도에서의 신냉전구도 형성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다. 북한의 언론을 살펴보면, 북한이 중러와 친선우호관계를 넘어 필수불가결한 관계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중러 삼각공조는 북한에 몇 가지의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중국과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은 북한이 지속적인 국가목표로 삼고 있는 체제 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실질적 차원의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셋째, 북한 비핵화 유보 및 핵보유국 위상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국제정치질서에서 북한이 주요 행위자로 부상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첫째, 생존과 정당성의 토대였던 북한의 주체외교가 훼손되거나 상실될 수 있다. 둘째, 향후 미국과의 관계개선 여지가 축소되어 독자적 대미관계 형성의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핵심어: 삼각공조, 신냉전, 국제질서, 중국, 러시아

9월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10월 1일과 4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열흘 사이에 5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는 차원이며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속셈 때문인 듯하다. 한편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신냉전질서를 구축하는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모색하는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세계질서가 변하고 있다. 미국 단독의 패권질서가 무너지면서 기존의 미중 경제패권 경쟁에 이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외교, 군사 갈등까지 발생했다. 미국으로서는 새로운 외교안보 지형 변화가 당혹스러울 것이다. 21세기 국제질서가 마치 냉전시대로 돌아가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소가 주축이 된 냉전시대와는 달리 현재는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 다극적 대립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변화에 주목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대 중립 간의 외교 및 군사 갈등으로 세계질서가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각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로 인한 국제적 고립상태에서 탈피하려는 대외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은 고립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대중·대러 접근 동향

최근의 국제질서 변화를 바탕으로 북한은 기존의 고립탈피 전략을 넘어 한반도에서의 신냉전구도 형성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다. 다시 말해 북한은 새로운 행위자로 부상하려 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제정한 ‘핵무력정책법안’은 이와

같은 북한의 단호한 대외 입장과 전략을 잘 보여준다. 핵무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겠다는 의미와 더불어 기존의 대북제재와 압박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한반도의 안보질서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러와의 외교·군사협력으로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최근 북한의 행태를 보면 이런 점이 더욱 돋보인다. 북한의 언론을 살펴보면, 중국과 러시아와의 각별한 인연과 관계를 보도하는 등 북한이 중러와 친선우호관계를 넘어 필수불가결한 관계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초 북한은 중국에 처음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제의했다. 중국과 러시아 간에 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된 적은 있으나, 북한과는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된 바가 없다. 어찌 보면 한국전쟁 이후 전례 없는 북중연합훈련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형국이다. 한미연합훈련에 대칭되는 북중연합훈련은 한반도 신냉전 질서 구축의 상징이라는 의미가 있다.

비슷한 시기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북한은 8월 3일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간섭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는 등 대만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중국 편에 섰다. 또한, 북한은 전승절(7월 28일)을 맞아 북중우의탑에 헌화하며 양국의 친선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는 4년 전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2018년 6월 19일~20일)을 “새 시대 조중관계의 기동을 떠받드는 초석”으로 칭송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을 비난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적극적으로 러시아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 국경절이나 광복절, 북한 정권수립일 등 굵직한 행사에 맞춰

축전을 교환하는데, 최근에 교환한 축전의 내용에는 기존의 축하친선 외에 현 정세와 관련하여 러시아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북러관계의 전면적 확대발전, 국제적 정의 수호, 전략전술협동 긴밀화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조성된 정국과 관련하여 북러연대를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은 8월 4일 ‘북러 모스크바 선언’ 21주년을 맞아 ‘북러평양공동선언’과 더불어 그 의의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러친선관계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러시아 자격정지 결의안에 대해서는 외무상 담화를 발표(4월 12일)하여 러시아에 대한 옹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이번 담화가 자신들과 직접 연계된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무상 명의로 격을 높였으며, 인권문제가 미국의 패권질서 유지를 위해 악용되고 국제기구가 정치적 압력과 공갈의 수단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7월에는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성향의 두 개 자치지역을 국가로 공식 인정했는데, 이 두 개의 공화국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은 러시아와 시리아에 이어 북한이 세 번째이다.¹⁾ 이에 대한 화답으로 러시아는 9월, 동방경제포럼에 북한대표단을 공식초청했으며, 북한에 대한 항공운항 제한조치를 해제했다.

이처럼 기존의 미중패권 경쟁이 새로운 북방삼각협력국과 한미일 등 남방협력 세력 간의 외교, 군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시절의 국가적 위상 회복과 국제사회의 지지 획득을 위해 중국과의 안보·경제분야 협력과 복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경제·군사강대국으로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1) 장세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밀착하는 북러관계” (평화와 통일, 2022년 9월호), p.15

삼각공조의 이점과 단점

이런 상황에서 북중러 삼각공조는 북한에 몇 가지의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중러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은 북한이 지속적인 국가 목표로 삼고 있는 체제 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 중러와 함께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군사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군사적 공격 목표가 되지 않는 대외적 환경을 조성하여 정권의 유지와 지속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둘째, 실질적 차원의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결의안 이행에 소극적 태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북한의 대외무역거래를 방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중러 삼각공조는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확대와 경제 협력 강화로 이어져 사실상 대북제재의 완화 및 해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 유보 및 핵보유국 위상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핵무력을 강화하면서 2012년 4월 사회주의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했고, 2013년에는 핵무력 보유를 정당화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지난 9월에도 핵사용 관련 법을 제정하는 등 핵보유국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중러 삼각공조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로울 수 있다.

넷째, 북중러협력 강화로 한반도에서의 신냉전질서 구축에 기여하면서 국제정치질서에서 북한이 주요 행위자로 부상할 수 있다. 미국과는 중러 대립을 활용한 ‘신 등거리외교’의 가능성이 있어 북한의 선택지가 확장될 수 있다. 북한은 핵 담판을 앞세우는 외교

전략을 구사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과 안보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러로부터는 군사협력의 강화를 통해 첨단 무기 기술을 수입하고 공동훈련을 통해 군사적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노림수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측면도 존재한다. 첫째, 생존과 정당성의 토대였던 북한의 주체외교가 훼손되거나 상실될 수 있다. 북한이 신냉전질서에 스스로 귀속되면 자신들의 독자적 입지가 축소될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영향에 휘둘리며 러시아와 중국과 한 묶음이 되면서 미국의 대중·대러 경제 및 안보 갈등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이는 북한의 독자적 생존력의 상실로 이어져 북한의 종속적 위상과 이미지만 부각될 수 있다.

둘째, 향후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여지가 축소되어 독자적 대미관계 형성의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러시아의 집단행동에 반강제적인 공동대처를 해야 할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북한이 동맹의 연루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맹의 연루는 약소국이든 강대국이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한 동맹국의 행동에 끌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동맹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동맹의 연루는 동맹국이 위험에 처할 때 다른 국가가 자동으로 말려 들어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 혹은 대유럽 대치 구도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중지 및 폐지하고,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러나 동맹에의 연루로 인해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미국의 경각심만 높이게 될 우려가 있다.

한편 북한의 대중·대러 접근은 한미일의 군사안보 및 경제 협력의 기회와 더불어 침체상태인 한일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

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북중러 삼각공조가 북한체제의 위기와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에게 분명히 주지시켜야 한다. 국제경제 질서가 서방세계의 금융질서와 자본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류협력 강화만으로는 체제를 지탱하기 어렵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서 비핵화 회담을 재개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체제를 지탱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